

# 성교육 영화상영 논란 도덕교사 징계위 열려

### 배이상헌 교사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출석

###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징계절차 중단하라” 촉구

### 교육청, SNS 통해 신고학생 가해 등 중징계 요구

성교육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 논란이 일었던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에 대한 가해 등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징계위에 출석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이 교사는 증인 신청과 함께 일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들 가해 등을 이유로 배이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

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가 이어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배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경찰의 수사 개시 다음날인 7월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들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성교육 자료로 상영,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도덕교사로서 성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 해당 영화가 사회 현실과 성별을 바꿔 생각해 볼모써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단편영화를 상영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국도덕교사모임이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 배이 교사와 일부 지지모임이 SNS를 통해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배이 교사의 수업 배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도 징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0월 “배이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지모임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해 온 2차 가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라”는 성명을 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이 교사에 대한 중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성윤리 수업을 한 배이 교사는 1년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당해 교단에서 배제됐고, 결국 중징계로 다시 교직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시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행정 과오를 인정하고, 배이 교사가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성평등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공교육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봉우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전 3시에 광주 북구 연제동 일대에서 운전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2km가량 차를 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는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병원 안갈래” 구급대원 폭행·행패 20대 입건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머리 부상을 입은 자신을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에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45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 구급대원 B소방교에게 주먹질을 하고, 구급 안전모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혐의다.

B소방교는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후두부 열상을 입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교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주차로 다투다 흥기 휘두른 30대, 현행범 체포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에게 흥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2)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B(57)씨와 말다툼 도중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된 흥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흥기로 인해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B씨는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불법 마약류 유통사범 32명 검거·14명은 구속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약 한 달(10월23일~11월30일) 간 3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29명, 대마 2명, 마약 1명 등이다.

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이 기간 마약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관련 불법 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섭, 출생·육아수당 대폭 삭감 불편한 심기...“설명 부족” 실국 질타

### 조례제정 해놓고 예산삭감은 시·의회 시민 신뢰도 잃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내년 출생·육아 수당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민의견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 중 423억원이 삭감됐다”면서 “그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하느라 시의원들에게 예산 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실국을 질타했다.

그는 “삭감액 423억원 중 55%인

233억원이 출생·육아수당이다. 우리 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면서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춰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2년에 걸쳐 580만~680만원을 지급한다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수차례 약속드렸고 시의회에서도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뜻을 밝혔다”며 “광주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대의를 쫓아 나라를 구했다. 광주가 출산을 제고에 앞장서

는 것은 광주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시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애타러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지난 11월13일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까지 제정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뒷받침해 줬다”면서 “그런데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면 해당 실국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며 시와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출산장려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육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관련 실국에서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의회에 설명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출생·육아 수당 예산 423억원 중 절반가량인 232억원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삭감했다.

시는 8~10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부활을 노리고 있지만,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